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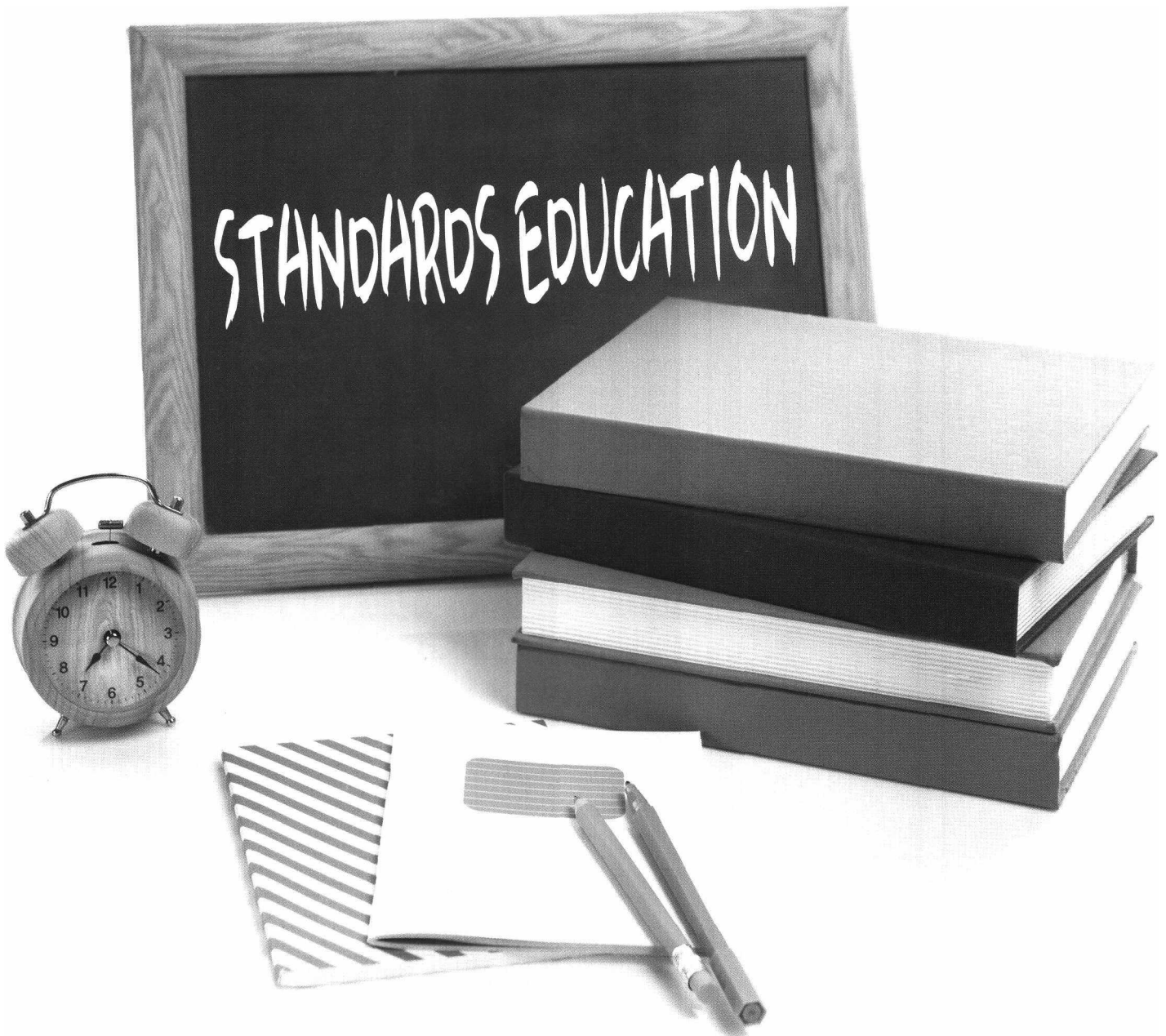
STANDARDS PRISM ① 표준의 쉼

글. 이진량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표준교육은 전문화와 대중화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생활표준화 사이트가 '애정남'만큼 널리 알려지는 그날을 위하여...

“앞으로의 표준교육정책은 표준의 영역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확대해 전 학문의 표준적 접근, 이른바 'Standard mainstreaming'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표준에 관한 대중잡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집자>”



**TV**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등장하는 '애정남'이 여러모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인 애정남은 우리 주변에서 적잖게 부딪히는 관습들에 나름대로의 수행 원칙을 정하여 법이나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여준다.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지하철에서 임신부와 할머니 중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지 등 그 소재도 무궁무진하다. 필자가 이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이유는 매회 반복되는 고정 멘트에 있다. 지키지 않는다고 쇠고랑을 차거나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우리들만의 약속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표준의 비강제성과 표준화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표준의 대상이 기술, 서비스에서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표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표현이 더 이상 전문용어가 아닌 것처럼 세계무역체제와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표준의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발표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SO 26000,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주체제 변경과 우측보행제도의 도입 등이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를 위해 필요했던 국제표준화가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표준이 더는 전문가만의 관심거리가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기도 하는 국제표준화는 시민,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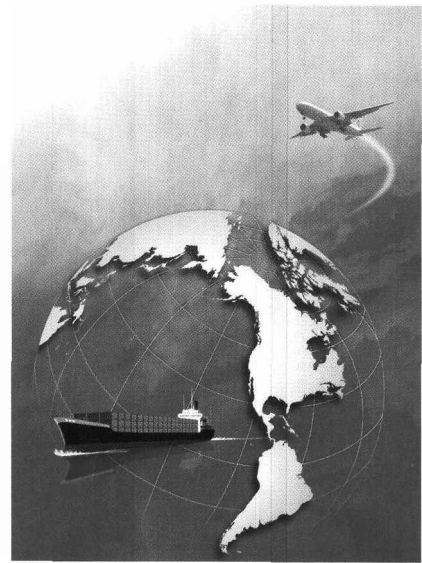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도 몇 년 전부터 표준교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기존의 기술 및 경영 영역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표준교육을 초,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쳐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 표준교육은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헌법에 표준제도를 언급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후발국으로서 경제성장의 도구로 표준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표준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표준정책은 시장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상품이 경쟁하거나 특정한 상품이 독점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산업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표준정책은 산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이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부문이나 중소기업 소비자단체와 같이 참여가 어려운 주체들의 표준화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제무역 및 통상에서 표준화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익의 감소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표준 선점이 곧 시장 선점이 되는 산업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이 전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표준화정책으로써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을 다양한 위협으



▲ 세계무역체제와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표준의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로부터 보호한다. 보건, 안전, 개인 정보 보호, 환경 등과 관련된 표준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표준은 주로 기술규제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세계화 시대에는 적합성평가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의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표준은 그 자체로 한 국가와 사회의 기술을 전수하는 공공재이다. 이는 특정 기술과 상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주체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표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다. 건강한 시장 형성과 산업 육성,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표준정책의 기초는 표준교육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보다 효율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표준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보호와 공공재로서의 표준제정을 통해 그 사회의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 사회에서도 표준교육은 표준화정책의 핵심 이슈

결국 전문화와 대중화가 표준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화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표준은 인류에게 무엇인가? 완벽하게 표준화된 세상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길몽인가, 악몽인가? 일찍이 헤겔이나 푸코와 같은 철학자는 점점 표준화되는 세상은 역사의 우연성과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여 마침내 인간 또한 사물처럼 표준화의 대상이 될 거라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 철학자 조르주 칸길렘(G. Canguilhem)은 인간의 삶 자체가 표준 생산 과정이라며 매 순간 최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인간 이성에 손을 들어 주었다. 표준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은 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표준화해야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등 표준화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고 상상하도록 만든다.

표준교육이 대중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이 점점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인식기술, 생체인식기술 등 새롭게 대중화되고 있는 신기술의 표준화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표준화를 제기하며, 휴대폰 전자파 논란의 예와 같이 기술이 유발하는 위험이 부각되면서 시민 사회가 표준화 참여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소통 채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교육은 기술 발전과 사회 진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기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제 사회에서도 표준교육은 이러한 기초 아래 표준화정책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006년, 전 세계 50여 개의 대학 혹은 기술연구소가 참여하는 국제표준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about Standardization)가 창립되어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7년부터 'ISO 표준화를 위한 고등교육상(ISO Award for Higher Education in Standard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질리양(Jiliang)대학, 네덜란드의 로테르담대학 등과 같이 성공적인 표준교육을 실행하는 대학들에게 상장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부터 유럽의 3대 표준화기구인 CEN-Cenelec-ETSI 공동으로 '표준화 교육을 위한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n Education about Standardization, JWG-EaS)'을 설립하여 유럽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터키와 태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프랑스, 스위스는 대학의 전문적인 학위과정에 표준화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들로 유명하다. 제네바

대학의 사회과학대는 'Standardization, Social Reg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이름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표준화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로잔(Lausanne) 대학은 경제학과 환경공학의 접목을 시도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스위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표준화를 기술 및 경영학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넘어 사회과학을 참여시키는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사회과학을 참여시키는 학제적 접근의 표준교육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화와 대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표준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50여 개의 국내 대학에 표준 과목을 신설하여 미래 산업의 핵심 인력인 대학생들에게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현장학습과 이론수업을 겸비한 질적인 강좌를 운영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초등학교 표준교육,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 등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친 표준교육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 대중화 전략으로서의 표준 주류화와 표준 저널리즘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비교해보면 국내 정책 향상에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보다 대중화된 표준교육을 위해 철학적, 사회과학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 교양과목의 대상이 공학도에게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확대하여 전 학문의 표준적 접근, 이른바 'Standard mainstreaming'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네바대학과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표준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과정 개발에 힘쓰고 이 학생들이 국내·외 표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관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필자가 프랑스에서 표준화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며 직접 프랑스 표준화기구(AFNOR)의 이러닝 표준화위원회(SC36)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은 향후 표준화에 대해 학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표준에 관한 대중 잡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표준 저널리즘'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기관지의 성격이 강한 '기술표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열린 정책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과학 저널리즘이 필요하듯이 표준이 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보다 열린 표준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대중 잡지는 필수적이다.

'애정남' 사이트에는 소재 제안을 위한 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매한 것들을 문의하는 형식으로 제작자들에게 방송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생활표준화추진협의회'가 발족했다. 국민이 생활 속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보다 쉽게 제안하고 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임이다. 생활표준화사이트(www.lifestandard.or.kr)가 '애정남'만큼 널리 알려지는 그날을 상상해보는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T&S**